

고령화의 농업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

농업유지 · 복지수요 · 유통시스템 · 생산전략 변화 등 문제점 다양
외국인 유입 따른 식품소비패턴 변화 대비 농산물 생산전략 등 필요

급격하게 고령화하는 한국 농촌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77세(남자는 73세, 여자는 80세)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3년 동안 1.5세) 오래지 않아서 선진국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추세이다.

농촌은 도시보다 20년 이상 앞서서 빠르게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농촌(읍·면 지역)인구는 1970년의 1,850만명에서 2000년의 930만명, 2005년의 876만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농촌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1970년 58.8%에서 2000년 20.0%, 2005년 18.5%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농촌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해왔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도시는 1960년의 2.5%에서 2000년의 5.5%로 증가하였고, 전국평균은 1960년의 3.7%에서 2000년의 7.3%로 증가했다. 이에 비하여 농촌은 1960년의 4.2%에서 2000년에는 14.7%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2005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주민등록인구 기준)은 전국 8.5%, 도시 6.7%, 농촌 15.6%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는 도시가 1970년의 3.4에서 2000년의 7.5, 2005년 9.2로 증가한데 비하여, 농촌은 1970년의 8.2에서 2000년에는 22.0, 2005년에는 23.2로 증가하였다. 노령화지수(0~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는 도시가 1970년의 5.4에서 2000년의 25.3, 2005년 33.4로 증가한데 비하여, 농촌은 1973년의 9.3에서 2000년의 78.7, 2004년 91.7로 증가하였다.

총 농가인구 중 60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의 7.9%에서 2000년의 33.0%, 2004년 40.3%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총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의 11.5%에서 2000년의 21.7%, 2006년에는 30.8%로 증가하였다. 농가인구는 2000년부터 초고령사회 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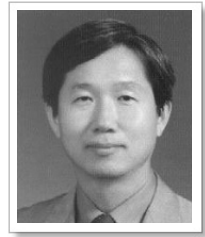
고령화의 원인

다른 여러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서 고령화가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다. 그 원인은 농촌현지에서도 노령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의 젊은이들은 보다 나은 직업을 선택하기 위하여 도시로 이동하고, 도시지역에서 일하다 은퇴하는 나이든 사람들의 전입 때문으로 밝혀지고 있다.

시대와 문화적으로 차이는 있었겠지만, 노인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의 대상이었고 경쟁의 대상이 아니었다. 유학사상으로 충만하였던 동양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충효사상을 바탕으로 노인에 대한 공경을 사회적으로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여 노인층 인구가 급증하고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노인의 희소성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피부양자로서의 사회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노인층은 과거의 노인들이 받을 수 있었던 효도를 바탕으로 한 공경은 기대할 수도 없는 회색지대(gray zone)에 놓이게 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지혜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일반적으로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농업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당면하는 문제는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고령화 진행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앞



서 종 석
전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는 본원적인 문제이다. 둘째는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외국농산물의 수입확대로 인한 농가경제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농촌주민의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농촌복지의 획기적 개선대책이 없이는 농업발전이나 농촌사회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셋째는 고령화와 더불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에 맞추어 도시지역의 소비자들에게 농식품을 공급하는 효율적 유통시스템의 확립과 관련된 문제이고, 넷째는 국가 전체적으로 건장한 고학력 신세대 노인들이 급증하는데 따라 이들의 취향에 맞도록 농식품 생산전략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 농업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는 물음의 뒤편에는, 현재 65세 이상의 농업인들이 곧 은퇴할 것으로 생각하고 별도의 농업인 육성정책을 실행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농업이 고사될 것이라는 우려가 포함되어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처럼 농업이 매우 잘 유지될 것이다. 앞의 질문에는 간과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65세 이상의 농업인들은 1960-70년대에 농촌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동할 때에도 어떤 이유에서건 농업을 직업으로 삼기 위하여 농촌에 머무른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농업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여간해서는 농사짓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약간의 고집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만이 아닌 다른 선진국에서도 농업인들의 은퇴시기가 점점 더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통계에서 확인된다.

다른 하나는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농촌총각들의 국제결혼이다. 최근 농촌 총각들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농업인력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농촌에 시집온 '이주여성농업인(농촌여성 결혼 이민자)'이 2006년 말 현재 약 2만여명에 달한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10년에는 이들의 숫자가 약 3만여명에 달하며, 49세미만 주력 여성농업인의 40%에 육박하게 된다.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농촌으로 이주해온 외국인 여성들을 제외하고는 여성농업의 인적자원을 논할 수 없게 되었다. 농업을 담당하는 구성원이 변하면 필요한 정책도 변해야 한다. 그동안 농수산식품부가 주력해온 생산중심 정책 외에 농업인 관련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고령의 농업인들과 여성이주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는 급증하는 농촌복지 수요와 관련된 문제이다. 사람들의 노후 경제상태는 과거의 수입, 저축, 지출 그리고 연금가입여부 등에 따라 좌우되는데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은 농업에서 얻는 소득이 낮을 뿐만 아니라 연금혜택에서도 제외되어 있어서 기초생활을 유지하기도 바쁘다.

우리나라 농촌의 복지 수준은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향상되고 있지만 도시와 농촌이라는 상대적인 측면에서 볼 때, 농촌의 복지 수준은 도시에 비하여 크게 낙후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의 경우에는 농업 및 농촌의 특성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에서 소외받기 쉬운 계층인 농촌지역의 노인·여성·영유아 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 크게 부족하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의 농업인들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생산적 참여적 복지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농촌주민들을 위해서는 생산적 사회참여를 통하여 자립과 자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할 능력이 없는 농촌 저소득



계층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그동안 저소득층 위주로 추진되어 온 복지정책을 농촌주민 전체로 확대하고,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는 급증하고 있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농식품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농업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국내 농식품 시스템의 인프라에 대한 공공 및 민간투자를 늘리고 농식품의 무역정책을 보다 자유롭게 하여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식품수요에 맞추어 시스템을 비용효율적 그리고 기동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중앙집중식 유통체계를 탈피하여 인구밀집지역에서의 교통체증을 피하고 여러 가지 잡다한 비용을 줄여야 한다.

도시지역의 근로 패턴 및 라이프스타일은 농촌지역에 비하여 점차 정적(靜的)으로 변하면서 에너지 소비를 낮추고 이에 따라 1인당 칼로리 필요량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높은 소득과 낮은 식품가격 그리고 보다 자주 음식을 섭취하는 도시민들의 경향은 비만을 부추기고 있지만,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는 오늘날의 도시 소비자들을 고려하여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양질의 음식을 공급하는 유통체제가 필요하다.

넷째는 농식품의 마케팅과 투자에서 시대 흐름에 맞도록 설정을 바꾸는 customization이 필요하다. 인구의 연령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농식품의 수요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직접적 효과는 식품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람들의 동적인 활동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필요

한 칼로리가 감소함에 따라 식품수요도 감소한다. 간접적 효과는 섭취음식 구성과 외식횟수의 변화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육류 소비를 줄이고 야채와 과일, 쌀 그리고 생선의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또 외식을 적게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은퇴한 사람들은 점심식사를 집에서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점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편의성과 작은 양의 식사 그리고 외식을 할 경우에는 약간 고급의 식당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변화추세는 농식품의 생산자, 가공업자, 판매업자 그리고 식재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모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인구가 감소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7년 이전에 이주 노동자와 관련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외국인들의 유입은 식품수요와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대부분이 젊고 높은 출산율을 보이기 때문에 인구 구성과 식품 소비 패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외국인들의 유입은 단기적으로 출신국가의 식품소비를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내국인들의 식생활패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외국인들을 대량으로 유입시킨 호주, 캐나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의 소비 패턴이 변화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농산물의 생산전략이 필요하다. Y

